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 정책토론회 토론문

권태훈 SBS 기자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과정을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기자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3개 단체가 위원 2명씩을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 정도의 논의를 거쳐 보도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가 만들었지만 발표하지 못했던 감염병 보도준칙 초안을 바탕으로 첨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의 과장, 추측성 보도는 늘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발병 때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여기저기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가이드라인이든 준칙이든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성과물이 일단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축이 돼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 초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련된 지침을 즉시 발표하지 못하고 추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까지 합류하게 된 이유는 기자들이 보도준칙을 얼마나 인지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즉 실효성의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 통제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3개 기자단체가 나서서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보도준칙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감염병 관련 기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표현과 사실 보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개월간의 회의 과정에서 늘 제기됐던 반론은 “언론이 이렇게라도 과장해서 떠들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피해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였습니다.

보통 학자나 전문가 그룹은 100% 가까이 확신하지 않으면 말을 아깁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한 비난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 집단의 발표는 항상 신중하면서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희귀 전염병이 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부나 전문가가 원인을 분석중일 때 가장 안전하게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 발표를 기다려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상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추측성일지라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론이 보도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가장 괴롭혔던 고민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현재 교수에 대한 질문>

1) 흔히 언론의 주요 기능으로 정보 전달과 함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꼽습니다. 요즘에는 정보 전달보다는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위기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물리적 방역과 함께 심리적 방역 표현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방역의 주체가 과연 언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심리적 방역이라는 말 속에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괜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를 포함해 전문가 그룹이 실체를 확인하고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은 심리적 방역으로 강요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심리적 방역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일정부분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와 전문가 발표에서 감춰진 것은 없는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없는지 등에 대한 감시견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방역과 사회적 백신은 언론의 몫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미디어 오늘에 기고하신 내용 중에 “재난 상황에서 위기소통의 핵심은 공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면서 “언론의 반복적이고 경쟁적인 기사는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유 교수께서는 어느 정도의 표현이 공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추측성 보도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언론의 자기검열’ 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부 시절 때처럼 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검열은 당연히 거부돼야 하지만, 언론 스스로 기사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특파원의 우한탈출기, 헤럴드경제의 대림동 르뽀, 아산/진천 격리시설 내부묘사 등의 기사가 과연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면, 표현 등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제되어야 할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언론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4) 과도한 경쟁 취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방송사의 추적 저널리즘이 때에 따라서는 사실 전달보다는 뉴스를 오락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제언 가운데 첫 번째로 언론의 정파성 유보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제언 항목 가운데 4번째로 정보의 가치 판단을 부탁하셨습니다. 제안의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언론이 있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은 과장 보도보다 더 위험한 자기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자가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언론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수 교수에 대한 질문>

인권, 혐오와 차별반대, 사회통합, 평등, 다양성 존중, 사회적 약자보호와 같은 대명제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대중적 선동 정치인들의 말을 따옴표로 그대로 옮겨 적는 이른바 ‘받아쓰기 저널리즘’의 위험성도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1) 혐오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마저 부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거부감은 일종의 이질성에 대한 자기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제시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더라도 종교의 정치화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마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부감은 건전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견제 도구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오와 거부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혐오표현과 언론>에서 언론이 편견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사실보도로 위장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부 언론의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 시민사회 유지를 위한 감시 표현까지 혐오로 분류하고 게시지는 않습니까?

3) 혐오현상은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사회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고, 공감이 확대되면 언론을 통해 더 증폭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언론의 본령이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상의 특이성이나 비판적 시각은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